

##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12. 22.

발 의 자 : 김선민 · (00인)

###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 명 : 한덕수

직 위 : 국무총리

###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또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헌법 제88조) 대통령의 계엄 및 그 해제 등 헌법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선포를 비롯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함께 문서에 부서함으로써(헌법 제82조)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성실히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보좌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진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국무총리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 한덕수는 다음과 같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고, 그 위배의 정도는 국무총리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첫째, 2024. 12. 3.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임이 분명함에도, 피소추자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함으로써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범하였다.

둘째, 2024. 12. 4. 위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12. 7.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위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불성립된 직후인 2024. 12. 8. 피소추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헌법 상 근거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향후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위헌·위법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하였다.

국무총리 한덕수의 이와 같은 위헌·위법한 행위들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헌법준수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국무총리 한덕수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

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반란행위 방조범(헌법 제77조, 형법 제87조, 제91조, 군형법 제5조)

### 가. 비상계엄선포행위 및 그 이후 전개된 경위 사실

2024. 11. 26. 김용현 국방장관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반대했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마저 반대함으로써 그 이후 북한으로부터 오물풍선이 날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장관의 ‘경고 사격 후 원점 타격’ 지시는 무위에 그쳤다.

12. 3. 22:25경 대통령 윤석열은 긴급 담화를 발표하여 “중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라며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 제77조 제4항에 정하는 국회에 대한 계엄통고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중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언했다. 대통령 윤석열은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를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포고령을 발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와 함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전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착수하였다. 한편,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기회로 하여 2024. 12. 3. 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민석 국회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 등 주요 정치인과 민간인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같은날 22:53경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윤석열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을 선포

한 이유를 사후적으로 밝히며 “미리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 통화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당사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요구결의안 참여를 곤란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체포한 정치인 및 민간인을 경기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다음 전화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며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간부회의를 통하여 독거 수용자들을 혼거방(단체 수감방)으로 옮기고 독방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한편 같은날 22:33경 계엄군 약 1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진입한 다음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고, 계엄군이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였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이와 같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접수 조치의 목적을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날 22:57경 경찰에 속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국

회 출입을 저지하였고, 비상계엄 후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였다. 또한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은 광수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못하도록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그리고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다.

국회는 12. 4. 01:00 국회의원 190인이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본회의를 열어 박찬대 외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01:02 이 결의안은 190인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와 같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은 12. 4. 04:30경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 나. 피소추자의 내란·군사반란 가담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임명에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을 제청하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헌법 제87조, 제94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헌법 제88조),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헌법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들을 심의하고(헌법 제89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계 국무위원과 함께 문서에 부서함으로써(헌법 제82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심의하여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닌다.

한편 헌법 제89조는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호),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33382호)은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동규정 제2조제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6조제1항),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배석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피소추자는 다른 국무위원 11명(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2024. 12. 3. 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하고,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균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임이 분명하므로,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이러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에 반하여 이를 막지 못하고 동조함으로써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범하였다.

## 다. 헌법과 법률 위반

### (1) 비상계엄선포행위의 헌법·계엄법 위반 여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비상계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지극히 평온한 상황에 있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 윤석열은 이와 같은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셋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고 있는바, 헌법 및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을뿐(헌법 제77조 제3항), 국회의 권능을 변경하는 그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헌법 제77조 제4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헌법 제77

조 제5항) 등을 통하여 계엄시 국회에 의한 통제를 당연한 헌법적 요  
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엄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15조). 이와 같은 헌법 및 계엄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능에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은 명확하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은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겠다.

## (2) 비상계엄선포행위의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

이와 같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  
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  
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이번 비상계엄선포 및 그 후속행위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위  
법적인 비상계엄이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이 헌법  
및 계엄법위반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경찰에 속하는 국회경비대가 국  
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한편,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한 군병력은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  
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한 행  
위 및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의 기능을 소멸  
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  
고, 계엄군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  
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를 접수한 행위 역시 헌법과 선  
거관리위원회법이 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압에 의하  
여 전복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판시 기준에 비추어,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를 접수한 점, 대통령 윤석열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체포·수감 지시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한 정치인 및 민간인을 경기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점, 특전사령부 및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병력이 국회에 진입한 점,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점, 경찰에 속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한 군병력이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이라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구체적으로 차단·방해한 점,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를 종합하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 제87조, 제91조가 정하는 내란죄의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 (3) 비상계엄선포행위의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여부

군형법 제5조는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인 점, 계엄군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등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를 접수하고 국회에 병력을 출동하여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여 수감하고자 하였고, 국회경비대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군병력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점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 윤석열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과 공모,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자 반란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를 종합하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행위는 군형법 제5조가 정하는 반란죄의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 (4) 피소추자의 내란죄 공동정범 등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그 해임을 건의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국무회의에 이 사건 비상계엄과 같은 명백히 위헌·위법적인 심의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헌법 제7조)으로서 마땅히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이를 제지할 헌법 상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

히 이에 동조,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공동정범의 중대죄책을 범하였다.

가사 비상계엄선포안에 찬성한 행위가 내란죄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찬성행위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라는 내란죄 실행에 확신을 주는 행위로서 방조범에 해당하고 형법 제90조제1항의 내란예비·음모죄 또는 형법 제87조제3호의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이와 같은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사 백보양보하여 피소추자의 행위가 내란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소추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헌법준수·수호의무 위반에 가담한 심각한 위헌·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 :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대통령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소추자가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비상계엄 발령에 찬성하여 이에 동참한 것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헌법 및 형법,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 2. 국무총리 한덕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한 국헌문란 행위(헌법 제66조, 제67조, 제71조, 제74조, 제78조, 제86조 등)

### 가. 국헌문란 행위사실

2024. 12. 4. 본건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12. 7.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위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불성립된 직후인 2024. 12. 8. 오전 11:00경 피소추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길 것”이며 “퇴진 전이라

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덕수 총리와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소추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는 헌법 상 아무런 권한 없는 자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것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나. 헌법 및 법률위반

헌법 제67조제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는 등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을 임면하다(헌법 제66조, 제74조, 제78조).

한편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우리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에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취임 후 피선거권이 상실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을 말하며, 사고란 대통령이 재직 중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순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더구나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헌법 상 권한대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여당대표가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은 위에서 본 권한 이외에도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헌법 제53조),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으며(제72조), 긴급조치와 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가긴급권을 보유하고(제76조, 제77조) 사면·복권권한(제79조) 그리고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

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중요한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98조, 제104조, 제111조 등).

이와 같은 권한들을 대통령의 궐위·사고가 아님에도 국무총리와 여당대표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불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를 공동담화 내용대로 행사하는 경우 이는 중대·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로서 그 행위의 효력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형법 제91조는 내란죄 중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제1호)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제2호)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소추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행위는 정확히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상 대통령의 권한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 다. 소결 :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

결국 이상과 같이 피소추자는 2024. 12. 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헌법 상 근거없이 대통령의 권한

을 향후 여당대표와 국무총리가 공동행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위헌·위법적으로 국헌을 문란케 하였다.

### 3. 결론 : 탄핵의 정당성 및 필요성

국회에 의하여 이미 탄핵소추가 의결된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자초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긴급하고 비상한 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헌법이 정해둔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에 대한 검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국회 통고 등의 절차 또한 전혀 지키지 않은 명백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 우리 헌정체제는 일찍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및 12·12 군사반란과 그에 이은 5·18 광주학살의 비극을 경험한바 있다. 이와 같은 헌정사의 아픔으로 인하여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헌법 제5조 제2항), 국민들 역시 군부의 반헌법적 망동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한편, 이후 경찰력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총기를 휴대한 군병력으로 하여금 본청에 진입하게 한 다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여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고자 한 것은 우리 헌법질서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도록 보좌할 헌법 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통령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선포행위에 동조하여 비상계엄령 선포를 좌시하였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해제 이후 헌법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를 명백히 위배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없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배제하고 이를 여당 대표와 공동으로 행사하려 하는 것은 또 다시 더욱 중대한 위헌·위법적인 국헌문란 행위로서 피소추자를 파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사유로 봄이 합당하다. 이에 국회는 국무총리 한덕수를 파면하기 위하여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른 것이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